

지역 정치권 “한전공대법 3월 국회서 반드시 제정돼야”

전남 국회의원 10인 국회서 성명... 시민사회단체 61곳도 광주서 회견 법안 5개월 넘도록 상임위 법안 소위 체류... 내년 개교 위해 처리 시급

한전공대의 내년 개교를 위해 절실한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한전공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이기 때

문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5일 국회에서 한전공대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022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

학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에서 출발했다"며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을 대표로 여야 51명 의원들은 한전공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5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은 "한전공대법은 더 이상 늦추기에는 국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의적인 협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도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이번 3월 회기 내 한전공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

했다. 이들은 "한전공대 설립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단의 일환"이라며 "세계 수준의 에너지 분야 대학을 설립,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남의 가덕도 신공항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새로 만들 때 호남 정치권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전공대가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의힘 사저 공세, 심각한 범죄행위”

“팔수도 없는 땅 시세차익 언급 최악 궤변... 대통령을 선거 정쟁에 이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반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며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으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장 최악의 좁스러운 원내대표이며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 투기, 부동산 관련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대위에서 "퇴입 후 고향에 귀농해 자연인, 시민으로 평범하게 인생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정쟁 도구로 활용할 문제냐"며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로 좁스롭지 않다. 민망하다"고 지

적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날조"라며 "역지 궤변이고 비열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경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라며 "팔지도 못할 집을 놓고 시세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불법이 확인됐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벌써 다 고발하고 면질타이식으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LH 투기 사건으로 분노한 민심에 정권에 대한 증오를 끼얹어보겠다는 악의적 과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쏘아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김한중 의장 불신임안 처리될 듯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감사위원 선임과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경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김한중 의장 불신임 안건'의 경우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또 최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학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등 40여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350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오세훈 35.6% vs 박영선 33.3%

리얼미터 서울시장 후보 3자대결 조사... 안철수 25.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자 대결에서 오 후보가 35.6%로 박 후보(33.3%)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25.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45.2%)과 50대(42.8%), 보수층(55.1%), 국민의힘 지지층(67.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4.3%)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83.9%), 대통령 긍정평가층(84.5%)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안 후보는 18~29세(34.9%), 중도층(31.4%), 국민의당 지지층(56.5%), 대통령 부정평가층(35.9%)에서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가상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아권 단일후보가 큰 격차로 앞섰다. 오 후보는 54.5%로 박 후보

(37.4%)에 17.1%포인트, 안 후보는 55.3%로 박 후보(37.8%)에 17.5%포인트 각각 우세했다. 아권 단일후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9.3%가 오 후보를 뽑았다. 안 후보는 32.8%였다.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4%, 민주당 31.2%, 국민의당 9.5%,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4.0% 순이었다. PNR리서치가 아주경제·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14일 서울 유권자 817명을 상대로 한 가상 3자대결 조사에서도 오 후보 34.7%, 박 후보 30.7%, 안 후보 26.1% 순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도 오 후보(37.6%)가 안 후보(33.2%)를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PNR리서치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순천 현안 전남도-민주당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15일 전남도와 전남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순천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남도와 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해 소 의원은 '에타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천역사의 지중화 또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구간 우회(약 5km) 등 순천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2차관과도 긴급히 만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한 경위를 확인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의 요구사

항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전선 전철화사업에 대해 순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소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과 관련하여에서도 전남도의 협조를 요청했고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 ▶ 중개환영.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